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June 2015 | vol.71

지방자치실천포럼

06







이달의 Issue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육성

: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이슈대담

–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 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71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하혜수 / **편집위원장** 이창균
위원 권오철 박진경 김건위 김성주 김대욱 강영주 / **담당부서** 연구기획과
연락처 T 02·3488·7361 F 02·3488·7305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 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CONTENTS

June 2015 | vol.71

2015.06

이달의 Issue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육성
: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8 이슈대담

–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 신우철 완도군수

26 논단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34 국내외 우수사례

– 먼저 온 통일 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

44 지방자치단체 탐방

–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

52 연구원 동정



04



18



44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종 교수)』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박재창(한국외대 교수), 이승종(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기조연설

- 1회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前 안전행정부 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왜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6회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발전정책(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7회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8회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김문수 경기도지사)
- 9회 지방자치,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10회 지역발전, 환경문제 그리고 국민행복(윤성규 환경부 장관)
- 11회 '국가개조'와 지방자치(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 12회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13회 국가와 지방의 재정협력(박재완 前 기획재정부 장관)
- 14회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15회 협치로 여는 제주의 미래(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16회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17회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김기현 울산광역시장)
- 18회 균형발전과 소통·협업의 지방자치(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9회
지방자치실천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 I . 발제〉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육성

반갑습니다. 포럼 장소에 나오면서 도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육성"입니다. 이 주제는 지방이 잘 되어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국가적인 발전이 어렵더라도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에 한국행정학회에서 국제세미나를 하면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황량한 땅에 큰 기계들이 놓여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2004년에 다시 가 보니, 6~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조선업계를 완전히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배는 부

품 중 엔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는 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엔진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사용하는 엔진의 1/3을 국내의 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품인 프로펠러의 경우 40%를 그 공장에서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배 조립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까지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인을 살펴보니, 현대중공업의 탁월한 기법이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조선업이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일본의 조선업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의 소득배가정책이 성공하면서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전문인력들이 바닷가 근무를 회피하게 된 것입니다. 70년대 중반이 넘어가니 동경대학교와 경도대학교의 조선공학부가 퇴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수 인력들이 바닷가를 떠나 도시로 모여들고, 바닷가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도 지역을 떠나 도시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동경대학교와 경도대학교에 조선공학부가 아예 없습니다. 당시 조선업계 경영진의 대응책은 퇴직한 OB들을 데리고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업은 설계가 생명이므로, 모델 설계를 작성하여 비축해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에 대비해서 배 종류별로 수천 장의 설계를 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모델 설계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10여 년 정도는 잘 유지되었으나, 두 차례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운송화물의 부피와 구조가 경량화, 소규모화되면서 선박 부품 역시 경량화, 소규모화된 것입니다. 자연히 설계가 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문 들어온 것을 기존 설계에 맞춰서 제작했으나, 몇 년이 지나면서 선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의 조선업계가 선주들의 요구에 맞추어 주문생산을 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업체들이 조선업계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조선업 역시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수인재들이 지역 근무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2~3년 있다가 대도시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신규채용 인재들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도 겪게 될 것이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국에 다 넘어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앞으로 중국

과 싸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생각이 바닷가에서 4년간 대학을 다니면 바닷가에 있는 조선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닷가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처에서 대학을 다니며 생활을 했던 인력들이 그 지역에 익숙하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중공업이 울산대학교 재단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 후 조선소에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현재 조선소에 취업하는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한 학생들이 군대 다 녀오고 졸업하면서 지지난해부터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현대중공업이 아니더라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업계 회사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근무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 문화, 의료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방금 한 얘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누리사업'이라는 게 있었



습니다. 지방대학을 육성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획재정부가 누리사업 프로그램을 확 줄였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시급한데 지방이 골고루 나눠먹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통령실 실장으로 재임 당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위주의 사고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현대중공업과 조선업계를 예로 들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60%가 넘고, GNP의 절반 이상을 수출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상품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에 남아서 공장을 지키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품의 품질향상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지방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재들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업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자꾸 현장을 떠나다 보니 조선업체들이 설계사무소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현장을 떠나서도 우수한 설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설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공장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기계를 개선할 때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우수하고 헌신적이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을 다니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식의 사고로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겠

다 싶었습니다. 대통령실 실장으로 일할 때 실무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 정부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악성 포퓰리즘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여론과 기제들이 정부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 오던 것들의 이름이나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가 고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고 통치 철학이 바뀐 것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런 악성 포퓰리즘 때문에 앞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꾸준히 밀고 나가야만 일자리 몇 개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빨리 뭔가 좀 해달라는 외부 압력들에 민감하게 대응하느라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결국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지역에 필요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는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 때 그 때 여론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토론〉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언론에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언론의 반응 때문에 정책을 수정해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을 이어가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당장 성과가 나지 않거나 혹은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10년, 20년 정도 길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길게 보면 우리의 자산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섭 충청남도 서산시장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근에서 모시는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실장으로 일하셨을 때 대통령을 모시면서 어떤 부분을 조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생각이나 정책들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윤호 중앙SUNDAY 편집국장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역별로 두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현 정부 들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II. 토론〉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모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가을에 들이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습을 했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성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쳐 현장으로 내려가면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은행들에게 돈을 풀어 지원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원했다고 보고받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지 하고 있다 보면, 지방 현장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오히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중앙에서 내려간 돈은 이미 다 회수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태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 1년 내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달려 하다 보니, 지역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 어떻게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모든 경제가 녹색산업으로 갈 것이니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가 앞장서 나가면 몇 년 후에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전략은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하자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녹색성장에서 하던 것과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갔지만,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현대라는 대기업이 있는 울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울산처럼 거대 기업이 있는 도시

가 아닌 다음에야, 그야말로 최고 통치자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없이는 지방자치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지방대학 육성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육성이 대학 내에 갇혀 있을 때는 지역사회에 소통 및 환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읽고 현재의 지점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그 지역의 특색을 알게 하는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다면 대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요즘 학생들을 보면, 취직하여 상경했다가 봉급이 빠듯하여 서울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생활수준이 안 맞아서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이 지역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기업이 대학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도 지역에 와서 인재를 고용하고 학생들도 지역에 와서 대학을 다니지 않을까 합니다.

〈II. 토론〉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지금 대학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한 번쯤 지나가야 하는 바람이 아닌가 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대학과 교수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기업이 직접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의 사회봉사, 사회적 책임 완수 등 최근 기업의 사회 환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기업들이 대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대표님의 의견처럼 행정학과와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부산대학교 교수

지방 문제에 있어서 정책 리더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접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 추진할 때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 집행력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 발전이나 지역 연계와 관련해서 평소 생각해두신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정책학에서는 사람, 구조,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환경 문제와 시스템 문제는 많이 다루었고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 불에서 4만 불, 5만 불로 가려면 지역의 창의력이나 활력 등을 정책의 문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 달리고 있는데, 고부가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긍정심리 등과 같은 심리학적 요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WEF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6위 정도 되는데 규제, 정책의 투명성 등 제도적 요인은 거의 100위권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 보는데, 대통령실 실장으로 일하셨을 때 국가경쟁력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하셨던 것이 있는지, 혹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의 발전이라는 게 낡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려고 보면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 문제를 놓고 씨름한 것이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제는 풀기 쉽지만 크기가 조금만 커지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바꾸려고 하면 찬성 의견은 별로 안 나오고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많이 비난하는데, 정치인들이 발목 잡아서 안 된다, 여야가 싸움이 붙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가 하면,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최근 10여 년 동안 여야가 싸우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

〈II. 토론〉

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상당히 깊은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일관성 있게 쭉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통치 철학의 차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지식인들이 의식을 갖고 자꾸 이야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측면에서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공공 영역, 민간 영역 할 것 없이 나라 전체의 공급 능력이 커져 있는데, 인구, 수출, 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공급 능력은 커져 있는데 수요는 자꾸 줄고 있는 것,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창조경제의 융합 분야를 담당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이나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과 같은 지역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조강연이 지역인재 양성, 지역대학 육성 등의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대학, 시민단체, 언론이 합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어진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면 확산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뭔가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게 마련입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것만 하려 하지 말고, 기존의 정책, 사업,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육성되어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이 사양화되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현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일시 및 장소 2015. 6. 11.(목) 완도군수 집무실
인터뷰 대상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진행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강영주 수석연구원 지난해 민선 6기 6.4 지방선거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특히 완도는 김종식 전 군수께서 지난 12년 동안(2002~2014년)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당선하신 신우철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군정으로부터 지속할 필요를 느끼고 계속 이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며, 반면에 차별할 필요를 느껴 새롭게 선보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 5기 군정은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및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로 정하고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이라는 군정방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완도 선포식

지금까지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온 농수산업도 이제부터는 질을 높이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완도산 특산물이 제값을 받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건강하면서 장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어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신뢰를 확고히 하면서 완도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수산' 실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얼마 전에 2015년 유권자 대상 수상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우철 완도군수 먼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기간이 일천한 제가 지난달에 '유권자시대행동'이 주관한 '2015유권자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유권자시민행동'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능경제인과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소통화합위원회 운영, 수산물소비촉진 등을 높게 평가하여 제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5년 유권자 대상 시상식

강영주 수석연구원 수산기사, 어촌지도관,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등 지나온 경력을 보면 해양, 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력이 현재 완도 군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신우철 완도군수 저는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생산량 감소로 위기에 놓인 전복산업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일 밤낮을 현지에서 어민들과 먹고 자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과 전문가, 어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자구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 공직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임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일방적인 지시나 행정지도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군이라는 행정 단위에서, 특히 완도와 같이 섬으로 이뤄진 지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완도군 지방자치 고유 행정에 관해 소개 부탁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 완도군은 26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은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며, 한편으론 섬으로 흩어져 있는 군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개 읍면 중 완도, 군외, 신지 3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전형적인 도서군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행정 체감도가 낮다 보니 자칫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가급적으로 도서 읍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장군수실 운영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읍면을 순회방문하여 주민들과 정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멀리 떨어진 외딴섬은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군정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지~고금」 및 「노화~소안」간 연륙·연도사업과 향후 「완도~고흥」간 연도사업을 위한 국도승격을 추진으로 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섬은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슬로시티 청산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산실 보길도, 가고싶은 섬 소안도와 같은 명품 섬을 만들고,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섬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완도는 김종식 전 군수의 채무 없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조 아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부채 없는 지자체로 유명합니다. 새로운 군수님께서는 완도군의 채무 운용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고, 군정에 임하시는지요?

신우철 완도군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넉넉한 재정여건(재정자립도 5.9%)은 아닙니다만, 2005년 군외면사무소 신축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2012년에 조기상환함으로써 빚 없는 군으로 거듭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대신에 적극적인 국비확보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와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군민 복지증진 향상과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왔다 자부합니다.

민선 6기 재정운영 방향도 빚 없는 건전재정 운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절감된 예산으로 우선 투자해 나감은 물론, 지역의 자원과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완도군은 청정해역에 전복을 비롯해 넙치, 해조류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사업 프로젝트'로 수산업 1조 원 시대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에 오래된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어장 청소로 수질을 개선하고, 또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제품의 명칭을 외국어로 변경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했으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소개 부탁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 지속가능한 양식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천혜의 깨끗한 바다환경을 오래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 5월 1일 완도군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과 행정수도 세종시장의 지지를 얻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민들 스스로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의식을 개혁하여 청정바다지키기 군민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 전복산업은 년 7,400톤을 생산, 3,700여 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어촌 밀물시대에 '돈 되는 산업'의 표준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전복 생산 2위, 수출 2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식사업을 위해 오래된 어장의 재배치, 수질 및 저질개선을 위한 어장환경개선, 건강한 어린전복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공급, 해상 가두리양식의 생산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단식 융복합 육상양식사업 추진 등 생산측면의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광어 양식 어가는 332어가로 1만5천톤을 생산하여 1,3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명품광어 선포식을 통하여 어류양식산업 활로 개척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친환경 광어양식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쾌적한 전복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한편, 해외시장개척 및 전복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회사인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 전복연구소 운영, 전복특구지정, 전복가공시설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육성 및 1조 원 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ando Abalone

▲ 완도 아발론 상표

최근에는 완도전복의 해외시장 유통에 대비해 '완도전복 글로벌 브랜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 아발론' 상표를 개발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6월까지 미국, 중국, 홍콩에 상표출원을 하고, 내년 7월까지는 상표등록을 모두 마치고 수출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완도는 수산업, 농업을 겸업하는 거주민이 많습니다.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 및 안정적인 생계 기반 조성을 위해 군수님은 어떤 정책을 두고 계십니까?

신우철 완도군수 우리 군은 양식어업의 메카 전국 제1의 수산군입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약 50만여 톤에 달하고 있으며 어업가구는 10,328호입니다. 우리 군은 전복과 광어, 해조류 양식산업이 주도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와 양식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맛과 질이 좋은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 소득이 높은 편이며, 어가당 다소 편차가 있으나, 연간 약 7~8천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되는 품종으로의 쏠림현상이 강해 일시적으로 양식시설의 밀식 과잉투자 등으로 경영에 있어 다소 어려운 어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복 사육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두리양식 시설량과 종자입식량을 줄이고, 특정 품종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지역별로 양식품종을 특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식품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잘 견딜 수 있는 종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복은 물론, 김, 미역, 다시마 등 육종산업에도 총력을 쏟는 등 양식기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책이 어업현장에 잘 스며들면 소득증대와 맞물려 경영의 안정은 물론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2015년 군수님의 완도군 신년연설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접근성 향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미래 지향적인 SOC를 확충해 생동감 있는 완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여러 방안 중 군수님께서 이번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것, 올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6기 1년의 성과와 경험을 살리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그려온 청사진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군민의

삶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전복과 해조류산업은 어장재배치 및 환경개선, 신품종 개발, 재해대비 융복합양식단지 조성 등 생산과 소득기반을 탄탄히 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매주 180명씩 최초로 완도를 방문하게 되어서 금년은 '중국 관광객 유치원년'이 되는 완도군정사에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섬 소안도 개발, 국내 최대면적을 보유한 동백치유의 숲 조성 등 비교우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전국 최고의 돈버는 축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완도행복복지재단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영주 수석연구원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내외 환경변화로부터 정책이슈 도출 및 맞춤형 정책 개발, 국정과제의 중장기 비전 제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정책개발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북한이탈주민의 의의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주민, 북한이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지역에 들어온 경우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 주민을 포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난민 등과 비교하면 한결 탈북자들을 넓은 의미의 이주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측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아직도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기관 등에서 통상 탈북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라는 용어는 탈북, 도주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한편 통일부에 의하면 정부내부문서, 보도자료 등에는 새터민으로 명기하기를 권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에서 개념화한 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개념에는 입국 후 5년이 경과한 자는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혜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수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국민'인 동시에 소수집단인 유입 '이주민'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탈냉전적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의 경제난,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00년 까지는 약 1,000여 명에 불과 하였으나 2001년부터 연간 1,000여 명 이상, 2006년부터는 1,500명 이상 입국하여 2010년 11월을 기점으로 20,000명을 넘어 2014년 말에는 약 27,000여 명의 북한주민이 입국하여 살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 주민 수가 감소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경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남성보다 탈북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14.6월 말 입국자 기준)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잠정)	'14.6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131	8,078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601	18,776
합계 (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732	26,85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82%	70%

자료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자료, 2015.

(2)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의 약 65% 정도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1] 이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한

1) 〈표 1〉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와 〈표 2〉 북한이탈주민 거주자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입국자 중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 수용자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선호 현상, 국민·영구 임대주택을 할당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 등으로 밀집 거주지역이 생겨났다. 북한에서는 평양지역 거주가 특권층만 누리는 혜택으로 인식되어 한국입국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14.6월 말 입국자 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11	1,825	667	285	252	231	175	183	256
여	4,358	5,216	1,613	645	736	670	527	727	778
합계(명)	6,569	7,041	2,280	930	988	901	702	910	1,034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2	150	125	152	116	132	51	6,953
여	428	459	367	399	370	298	127	17,718
합계(명)	570	609	492	551	486	430	178	24,671

자료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자료, 2015.

(3)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연령대별로 볼 때, 30~39세가 7,890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29세가 7,339명으로 약 29%, 10~19세가 3,229명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0세 부터 39세까지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14.2월 말 입국자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77	1,483	2,169	1,905	1,135	418	307	7,994
여	575	1,746	5,170	5,985	3,114	935	849	18,374
합계(명)	1,152	3,229	7,339	7,890	4,249	1,353	1,156	26,368

자료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자료, 2015.

(4) 출신지역별 현황

출신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을 분석해 보면, 함경북도 출신이 16,95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6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양강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출신이 뒤를 잇고 있

다. 즉,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북한탈출이 용이한 지역에서 탈북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재북 출신지역별 현황('14.2월 말 입국자 기준)

구분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불상)	계
남	206	59	917	61	399	334	309	719	4,465	249	154	44	78	7,994
여	306	65	2,144	112	523	374	208	1,666	12,493	158	215	25	85	18,374
합계 (명)	512	124	3,061	173	922	708	517	2,385	16,958	407	369	69	163	26,368

자료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자료, 2015.

2. 문제점

(1) 한국사회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첫째,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은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이다.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은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크며, 가족을 향한 이와 같은 감정을 송금 등의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건강상의 어려움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치과, 산부인과,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장애를 호소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심리적 고통과 우울함, 탈북과정에서 생활의 피폐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취업능력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익혔던 기술은 남한사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다. 기대수준이 높으면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무직으로 지내게 되며, 북한에서의 직업을 남한에서도 갖기 위해 다시 전공 공부를 시작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북한사회에서 습득된 행동이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노동의 강도가 세다는 이유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넷째, 경제적 및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이다. 남한에서의 의식주 생활이 북한에서보

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 무직·비정규직·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핍감을 느낀다. 한편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 나가야 한다. 지역의 지리나 교통편 이용, 공공기관이나 봉사기관 이용, 자녀 교육 및 진로지도, 생활용품 구입, 합리적인 소비생활, 결혼과 이성교제를 위한 정보 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2)]

⑵ 인식상의 문제점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한국민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본인들에 대해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에 오면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오지만 남한사회에 와서 경제적, 차등적 대우에 불만을 갖거나 피해의식이 있다.

한편 한국민은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5년 동안 임대주택이지만 집을 주고 있고, 직업훈련비 지급, 고용지원금 지원, 자격증을 딸 기회를 주고 있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에 의한 성취의지의 부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이 목숨을 건 국경탈출, 중국, 몽골사막, 동남아시아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 온 만큼 한국과 국민은 당연히 그들에게 집, 직장 등을 지급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의식이 관습화되어 그들 스스로의 자율의지에 의한 삶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정부의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율의지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냉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을 통한 성취를 통해 자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며, 따라서 국가에서도 자율의지와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

2) 박영자, '한반도 통일·통합을 관통하는 사회통합가치와 정책방향', 이화여대 통일연구원 가을학술대회논문, p.57–60, 2011.10.20. 참조

3.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안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자치단체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 특히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면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 설정 및 핵심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역에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실무적인 업무 발굴 및 추진은 지역주민인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관리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 거주지역에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 사회적응교육, 인식개선, 취업지원 사업 등이며[3]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사업 및 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화합이다. 한국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임대주택지역은 전입을 원치 않거나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 역차별로 여기는 등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생소하고 낯선 존재로 인식하여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거나 관심이 없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한국민에 대한 피해의식 등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상호 화합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텃밭운영 등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지역주민의 북한이탈주민 멘토 활동사업,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운영, 지역축제에 북한음식 소개 등의 교류사업의 추진과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서로 간의 불신을 점차 없애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소속감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지속적인 지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바로 지역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취업 애로, 탈북과정에서 겪은 불안심리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직장 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다.

3) 그 외 의료·주거·교육 지원사업, 자녀 장학사업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사회적응교육의 지속[4],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건강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제도 확대와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5]

셋째,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의 실시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과 정보교류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인과 동일한 직업훈련과정 참여시 수업이해 곤란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에 앞서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과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하고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 취업 성공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

넷째, 이주민정착지원센터의 설치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따른 '이주민 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운영프로그램은 법인·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참여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범 지역정착센터 운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지방권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집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적응단계·안정화단계·정착단계 등 북한이탈주민 대상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구분하되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지역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며 지역의 자원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의 직장 내 참여 유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지역간담회 및 결연식 참여가 부족하며, 직장 내에서의 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에 대해 1:1 멘토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니터링 등의 업무역할을 부여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조직문화 차이, 직장 내 북한이탈주민과의 갈등사례, 갈등관리 해결을 위한 사전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청사내에서의 북한이탈주민과의

---

4) 사회적응교육은 취업에 앞서 조직적응력 제고, 북한식 직장개념 탈피 등 의식변화와 자본주의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5)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게는 외상 후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와 직장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갈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본 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회를 두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발굴, 북한이탈주민 교육 및 재정지원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사례〉

먼저 온 통일 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왜 중요한가?

국내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27,500명에 이른다. 이제 TV나 언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접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었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북 전단살포 등을 주도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사선을 넘어 남쪽의 조국을 찾아왔지만 남한사회의 편견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다수이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침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한 국가이다. 통일은 단순히 제도나 영토의 통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의 주체는 결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통일이 완성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5천만 남한 주민들과 2천 4백만 북한 주민들이 남이 아닌 '우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2만 7천여 명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2천 4백만과의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는 등 통일 준비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의 경험은 향후 남북 주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시행착오들은 남북 사회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는 미리 온 통일이자, 진정한 통일의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II.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현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면 초기입국지원 단계, 보호지원단계, 거주지보호단계의 3단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 초기입국지원 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보호신청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이후 1개월 내외의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에 이은 보호지원 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 임시 정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보호 단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사회적응교육을 위하는 과정으로 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을 비롯한 각종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며,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의 정착장려금도 지급된다. 정착금 지급 정책은 과거 일시 지급 방식에서 분할 지급으로, 그리고 일괄 지급 방식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초기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입국시의 브로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거주지 배정 이후에는 당장의 생계가 급박한 상황이므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착장려금 수혜 인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다양한 직업훈련도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이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의 지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기관, 단체의 숫자는 매우 많다. 우선 재외 공관(외교부)에서 보호요청을 하게 되고, 입국과 동시에 국정원, 경

찰청 등 합동 조사를 받는다. 보호여부가 결정이 나면 통일부가 주관하는 하나원에서 시설보호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폴리텍 대학 등에서 직업 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의 협조를 얻어 학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거주지를 배정 받으면 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민간 단체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정착도우미, 정주도우미, 민간봉사자와 북한이탈주민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들이 배정된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이 생활 안정, 사회 적응 과정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의 복지관과 지자체들에서도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하나센터' 등이 개소하면서 이들의 초기 정착 과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7,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정책의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촘촘하고 다양한 기구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기능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컨대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과 퇴소 후 직업훈련의 연계성,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센터와 기존 조직들의 역할분담 및 관계 설정, 크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등이 배정되어 있으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하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보호담당관과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기존에 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던 정착도우미 제도 역시 하나센터와 역할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착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과제인 취업지원 문제는 직업 선호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교육,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 부족, 취업 이후 관리의 부재 등 다양한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 관주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이며, 초기입국지원 단계나 보호지원 단계서 지자체나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거주지편입지원단계에서도 중앙정부 및 관주도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지편입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지자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경험이 있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Ⅲ.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7,268명으로 전국의 28.6%를 차지한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역은 경기도이며, 그 뒤를 이어 서울에 6,717명, 인천에 2,379명이 거주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총 16,364명으로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64.3%에 이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주소지는 지방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2014.12)

경기	서울	인천	충남	경북	경남	부산	충북	세종
7,268 (28.6%)	6,717 (26.4%)	2,379 (9.3%)	1,055	990	952	949	948	25
대구	강원	광주	전남	대전	전북	울산	제주	계
683	628	576	568	512	503	483	200	25,436

자료 : 경기도청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 지역으로서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대표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공직(계약직)에 채용하였으며, 관내 기초 지자체에도 채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역시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을 도내 유치·지원하고 있다. 2008년 파주에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메자닌 아이팩'(북한이탈주민 25명 참여, 열매나눔재단과 SK가 자본금 5.5억 원 후원)을 유치하였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일방적 지원 방식이 아니라 생산과 경영에 수혜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메자닌아이팩'



자료 : 서울신문(2010.9.20).

2008년 하나원이 기획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20명을 인턴으로 CJ가 우선 채용하고 의왕시 소재 직업훈련학교에서 기업수요에 맞춘 직무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하는 형태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先채용 後직무훈련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차원에서 관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추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전담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08년 경기도는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제2부지사 소속으로 남북협력담당관(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설치하고 정착지원팀장이 관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규모가 경기도와 비슷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과 소속 행정관리팀 주무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는 점에서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 아카데미, 주민 결연사업, 취업교육 등은 남북하나재단의 공모사업이나

민간단체(하나센터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차가 심한 편이어서, 이들의 정착 지원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도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자체별 정책의 차이를 낳고 있다.

Ⅳ.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문제가 중앙정부의 과제로 인식되면서 아직 다수의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목표는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정책이 시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들의 처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목표는 이들을 정상적인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3만을 넘어 수십만에 이르게 된다면 시혜적 차원의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이들의 일방적인 한국사회 정착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통일은 일방이 다른 일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상호 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와 남한 주민들 역시 북한이탈주민, 나아가서는 북한 주민들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 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사회의 포용력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으며, 남한 주민들 역시 함께 사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

I. 개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장의 폐허 속에서 다시금 국가건설을 시작해야 했던 서독정부에 있어 분단기간 동안 예기치 않게 밀려드는 동독이탈주민들의 수용과 정착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대규모 이주민에게 긴요한 숙박, 부양, 체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통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독이탈주민은 타 이주민과 달리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따르면 독일 국민이나 배타적인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가진 동시에 구서독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독으로부터의 이주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컸다.

이렇듯 전후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혈통주의, 동화주의, 사회경제적 통합원칙을 견지하면서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일관성 있게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분단기간 동안 총 5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동독이탈주민을 특별한 문제없이 수용하여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1〉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이탈주민의 시기별 구분(1949~1990)*

기간	이주현황(명)		
	이탈주민	합법이주민	계
1949 ~ 1961.8.12	3,419,042	–	3,419,042
1961.8.13. ~ 1988	234,684	381,376	616,060
1989 ~ 1990.6.30	480,291	101,947	582,238
계	4,134,017	483,323	4,617,340

* 1961년 베를린장벽 축조 후 동독정부 허가에 의한 합법이주 형태 시작

II. 지원정책 개요

서독정부는 동독이탈주민의 서독 정착을 통일의 시험대(Test für Wiedervereinigung)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이면서도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즉, 같은 동포로서 이들을 서독 국민으로 간주하여 법적, 정치적으로는 서독인과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주로 인해 상실된 재산을 상쇄해 준다는 부담조정 원칙에 따라 직업 취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사회통합의 기초로 삼았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체계적인 수용절차에 따른 자격 신청 및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아래 〈표 2〉와 같이 서독정부의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크게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정착지원, 생활지원을 들 수 있다.

〈표 2〉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지원정책 내용

항목		지원내용
주거 지원	• 임시수용소 • 주택소개 •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건설법 제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게 5년 동안 주택입주 혜택 • 공공임대주택인 복지주택(Sozialwohung) 제공, 임대주택 월세 보조금(Wohngeld) 자격 부여, 주택구매시 장기 저리 융자 제공 *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융자
사회 복지 지원	• 의료보호, 질병급부 • 연금보험 • 실업보험 • 실업수당 • 산재보험 • 전쟁희생자 원호 • 사회부조 • 개별 이주민의 종전 소득을 서독 임금으로 재평가 후 등급화하여 지급	• 의료보험법에 따른 급부금 수혜 • 연금법에 다른 개별적 급부금 수혜(동독, 동베를린에서의 기여금 불입 기간 포함 산정, 자영업자의 기여금 추가 납입시 연금대상에 포함 • 동독에서의 실직 기간, 정치범으로서 구류 기간, 자영업 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 산정 • 단체협약임금의 63% • 서독보험법에 따른 급부 제공 • 연방원호원법에 의한 원호 • 생계비 지원, 주택임대로 지원, 난방비 보조금,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교육 지원	•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 보조 • 동독취득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명서 인정	• 연방교육촉진법(교육촉진금 지원) • 연방실향민법(학력 인정)
직업 정착 지원	• 대졸자 사회진출 보조 • 취업상담 및 주선	• 학업추가 이수시 장학금 지원 • 연방 노동청은 취업촉진 소요비용 무상 지원 혹은 대부 * 자영업: 유리한 조건의 융자 제공, 자산 형성 장려금 지급, 농업: 보조금 및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등
생활 지원	• 상담과 후견 • 자녀수에 따라 양육비 지급	•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 연방자녀수당법

출처: 김영윤(2003: 7–10)

동독이탈주민은 독일혈통 이주민으로서 서독주민과 동등한 정치적·경제적·사회복지적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며, 동시에 서독사회로의 통합을 의도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기본적인 수용절차 및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즉, 동독에서 취득한 시험결과나 자격증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연령별·직업종류별로 교육 및 취업지원이 제공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취업 관련 정보제공 및 알선을 통해 동독이탈주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체였다. 취업 전까지 실업보험이나 실업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이 행해졌다.

Ⅲ.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시사점

서독정부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적 호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호의적이었고 따라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었다는 점 외에 이러한 경제활동이 라인강의 기적(Das Wunder am Rhein)으로 대변되듯 수용사회(서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여 외에 정치적으로는 체제정당성 획득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독일혈통을 기반으로 한 국민통합 제고의 측면에서 나름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분단기 동안 크게 두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상당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기본 골격은 큰 변화없이 점진적 개선을 통해 유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아데나워 시기에 지원정책 법체계의 토대를 세운 후 브란트와 콜 시기에도 지원정책 기조 및 기본적 정책수단들이 유지되면서 확대·강화 되었다. 한편 1980년대 들어 동서독 이질성의 심화로 인한 동독이탈주민과 서독인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 관점의 사고방식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정부 외에도 시민사회가 통합정책의 중요 행위자로서 한 축을 담당했는데, 특히 카리타스, 디아코니 등 6개 사회복지단(Spitzen-Wohlfahrtsverbände)은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정부의 동독이탈주민 지원 정책 집행 및 일부 정책결정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독일 시민사회의 사회참여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기는 하나 정부의 승인 하에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정책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제공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주민의 수용·정착을 오롯이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시민사회가 구체적 실행을 하고 국가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는 분담구조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동독이탈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태도 또한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1980년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경제적 자립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서독 노동청 등을 통하지 않고 동독이탈주민 스스로 구직활동에 뛰어든 비율이 70%에 이른다든지 실업 후 타직종 직업교육을 받아 전직한다든지, 재취업 시 이전보다 낮은 대우의 직장도 마다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전략으로 실업 6개월 후 재취업률은 같은 신분의 서독인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한편 수용과 정착을 넘어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평가에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서독정부는 동화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단기적 관점에서 초기 정착단계의 경제적 자립이 해결되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1970년대 이후 동서독 간 이질성의 심화로 인해 이러한 이질적인 DNA를 지닌 두 주민집단 간에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증폭되어 갔다. 서독의 경우 이러한 갈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 결국 통일 이후의 구동서독 주민 간 극심한 사회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독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지원정책은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서독정부가 추구했던 사회 '경제'적 통합은 사회 '문화'적 통합의 보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강조 외에도 수용사회와 이주민 쌍방의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영윤 (2003)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FES-Information-series.
• 허준영 (2012)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 Hur, Joon-Young (2012). Die Integration ostdeutscher Flüchtlin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Beruf und Qualifikation.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Reihe 31 Politikwissenschaft, Peter-Lang.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

완도군은 전라남도의 서남단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지면적보다 12배가 넘는 바다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군이다. 완도군은 제일 큰 완도 체도를 비롯해 고금도·약산도·평일도(금일읍)·신지도·노화도·보길도·청산도 등 55개의 유인도와 210개의 무인도로 형성되어 있어 푸른 남해 바다 위에 마치 구슬을 뿌린 듯 섬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



보길도 세연정 명승 제 34호

가고 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하늘도 바다도 섬도 푸르다 하여 청산도라 불리우는 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청산도는 청정하고 아름다운 원시의 자연과 다랭이논, 돌담길 등 때묻지 않은 자연과 삶이 배어 있는 풍경, 그리고 한눈에 조망이 가능한 다도해 등 경관자원이 매우 풍부한 섬이다.

청산도는 해맑은 풍경과 전통성을 간직한 섬 생활문화로 인해 2007년 12월 1일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슬로시티는 문명에 매몰된 현대인이 늘 바쁘게 살다보니 자연과 함께 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연적인 삶'을 여유있게 살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이다.

청산도는 매년 4월 한 달 간 '느림은 행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산도 슬로길을 걷는 청산도슬로축제가 개최된다. 청산도 슬로길은 주민들의 마을간 이동로로 이용되던 길로서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하여 '슬로길'이라 이름 붙여졌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



▲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하고,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세계슬로길 1호'로 인증받았으며, 길이 지닌 풍경, 길에 사는 사람과 동물, 식물, 길에 얽힌 이야기와 어우러져 천천히 거닐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2013년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애환이 담겨있는 청산 '구들장 논'이 과학적인 영농기법으로 인정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3월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올해에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받기도 하였다.

세계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은 영화「서편제」(1993년)의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널리 알려진 진도아리랑 장면을 찍을 때 청산도의 풍경에 매료되어 짧은 한 컷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나리오를 즉석에서 수정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5분 20초의 롱 테이크 명장면을 만들어 냈다.

보길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

보길도는 섬 전체가 자연공원이며, 문화재이다. 울창한 숲, 조약돌이 깔린 해변, 청자빛 바다, 깎아지른 해안절경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섬이다. 보길도는 누구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섬이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산의 정착지 일대를 '부용동'이라 이름하고 격자봉 아래에 집을 지어 '낙서재'라 하였다. 또한 십이정각, 세연정, 동천석실 등을 지어 놓고 어부의 생활을 춘하추동 계절마다 10수씩, 모두 40수를 노래한「어부사시사」등을 지어 국문학 사상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인공정원으로 꼽히는 곳으로 세연정을 들 수 있다. 격자봉에서 흐르는 맑은 계류를 하류에서 받아 만든 큰 못을 세연지라 하고, 세연지의 물을 끌어들여 인공연못인 회수담을 만들었는데 두 못 사이에 세운 정자가 바로 세연정이다.

보길도는 수려한 자연풍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예송리 해수욕장은 활시위처럼 휘어진 약 1㎞의 해변에 타조알 크기에서부터 바둑알 정도 크기의 깻돌이 폭 50m 넓이로 분포되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난대림수종이 분포하여 하나의 천연적인 자연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더불어 보길도의 산을 본 후에야 보길도를 보았다고 해야 할 정도로 거대하고 자연식물원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명산이 즐비하다. 정상에서 제주도, 땅끝, 진도, 추자도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길도의 주산인 격자봉(433m), 뾰족한 산으로 사계절 장관을 이루는 뾰족산, 그리고 망월봉, 광대봉, 수리봉 등 푸르게 살아있는 산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외에도 우암 송시열이 백도리 해변 석벽에 귀양가는 자신의 심경을 한시로 새겨놓은 글씐바위와 일몰이 아름답고 황홀한 망끝 전망대 등은 보길도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장도 청해진 유적지(사적 308호)

장보고대사는 1200년 전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떨친 무역상이자 군인이었고 정치가이자 항해가이며 특히 당나라를 떠돌던 우리 유민을 거둔 박애주의자였다. 대사는 대략 790년경 완도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궁복, 궁파라고 하였으며 일본의 역사서에는 장보고로 기록되어 있다.



▲ 장도 청해진 유적지

청해진 유적 장도는 장보고대사가 해상무역을 주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해진의 본영으로서 1984년 사적 308호로 지정되었다. 장도내의 청해진성은 크게 토성과 목책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토성은 장도유적의 정상부를 둥글게 감싸고 축조되었다. 성은 판축기법으로 축성되었는데 목책, 매납유구, 굴립주, 우물 등이 발굴되었으며, 예전에는 하루 한차례 썰물때 장도를 방문할 수 있었으나 24시간 탐방이 가능한 목교가 시설되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장보고기념관은 장보고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해양개척 정신과 역사문화의식을 함양하는 전국민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실, 기획전시실, 휴게실, 상설전시실(1전시실, 바닷길, 2전시실)로 꾸며져 있고, 고증을 거쳐 축소 제작한 장보고 무역선과 중국공예대사 육광정씨가 제작한「해상왕 장보고 대사」해상무역활동을 형상화한 목조 벽화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상설전시실은 유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기존의 단편적인 전시체계를 탈피하고, 모형과 영상·정보검색·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시스템 운영 등 입체적인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보고 동상은 현존하는 국내 동상 중 최대 규모로 내부에는 장보고 대사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12점의 부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는 장보고 대사의 해적소탕과 해상무역 장면을 연출한 투조 2점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주변 조경, 주차장, 모험놀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을 되새겨 보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해신」촬영 세트장은 청해진 본영, 객사, 저자거리 등 청해포구가 만들어졌으며, 드라마 해신이 끝난 이후에도 MBC「태왕사신기」, MBC「주몽」, KBS「대왕세종」, KBS「근초고왕」, MBC「기황후」등 각종 사극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완도수목원

완도수목원은 상록활엽수로 세계 최고·최대의 집단 자생지이다. 1,050ha의 광활한 면적에 169과 3,449종의 동식물이 자생하거나 이식되어 자라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산림전시관, 열대·아열대 온실, 관찰원, 관찰로, 수생식물원, 전망대, 야영장, 농구장 등이 갖추어져 잇다. 4계절 산림욕이 가능하며,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고, 완도



▲ 완도수목원 동백숲길

최고봉인 상황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동백군락지에 동백 치유숲 조성과 휴양림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 충무사(사적 114호)



▲ 고금 묘당도 충무사 관왕묘비

충무사는 충무공 이순신과 그의 조방장이었던 가리포첨사 이영남을 배향하는 사당이다. 충무공은 1598년 2월 8,000여 명의 수군을 이끌고 고하도에서 이곳으로 진을 옮겨 고금진을 설치하고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수군을 정비하여 같은해 11월 9일 노량해전에 출전하여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인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같은 달 19일 5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공의 사후 시신은 이곳 월송대에 모셔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 충남 아산의 선영에 안장하였다. 충무사는 당초 관왕묘로 창건되

었으나 공의 사후 190여 년이 지난 1791년(정조 15년)왕이 탄보묘란 사액을 내리고 이순신 장군과 휘하 장병들을 배향하게 하였다가 충무사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정전과 동·서제, 동·서무, 관왕묘비 등이 남아 있다.

다도해 일출공원과 완도타워

365일 일출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곳, 다도해의 중심에 우뚝 솟아 '관광 완도'의 상징이 되는 다도해 일출공원과 완도타워는 공원내부에는 진입광장, 중앙광장, 쉼터 산책로, 완도타워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일출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완도타워의 크로마키 포토존과 야간 레이저 쇼가 있다. 완도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시행되는 레이저 쇼는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3년에는 13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해마다 '해맞이행사'를 진행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여 하루 1,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 완도타워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신지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남해안 최고의 하계 휴양지이며 끝없이 펼쳐진 은빛 모래와 쪽빛바다, 그리고 아름드리 해송과 어우러져 푸르름이 더욱 빛나는 곳이다. 고운 모래알이 파도에 부딪치며 울음소리를 내는 듯한데 그 소리가 십리까지 들린다 하여 "鳴(울명), 沙(모래 사)"자를 써서 불리워진 곳! 이곳이 바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다.

명사십리는 길이 3.8㎞, 폭 150여m로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해수욕장으로 인기가 많고, 특히 뜨겁고 부드러운 모래로 하는 모래찜질은 노인들의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변의 갯바위는 돔과 농어, 광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해 낚시터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멀리서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해 '사랑의 텐트촌'을 만들어 가족단위 피서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경

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가치는 전국 해수욕장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경관 및 관리운영 등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전국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하는데 지난 2007년부터 3년 연속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3년에도 전국 3대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신지도는 2005년 완도읍과 신지면 사이에 신지대교가 완공되어 사실상 육지화 되면서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남해안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자리잡았다. 한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2007년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은 이후 이벤트광장 조성, 화장실 신축, 자동차 야영장 조성 등 신지명사십리 관광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도리 구계등(명승 제3호)

통일신라시대 황실의 녹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구계등은 크고 작은 돌이 모여 아홉계단을 이루고 있어 여기에 파도가 밀려와 아름다운 해조음을 하루종일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 모습은 장관이다. 겨울철에는 일출과 일몰이 일품이며 특히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일몰은 황홀한 자연의 대서사시이다. 후사면에는 수령 100년 이상의 소나무·참나무·후박·팽나무 등 40여종의 상록활엽수가 자라고 있으며 숲속 탐방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들과 함께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자료제공: 완도군청

정리: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19회 지방자치실천포럼 개최

일 시 2015년 5월 27일(수) 07:00 ~ 09: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제19회 지방자치실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정정길 울산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마음 단합대회

일 시 2015년 5월 28일(목) ~ 29일(금)
장 소 문경 STX 리조트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5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29일 금요일까지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연구원 발전방안 논의와 단합 체육대회,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하였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업무협약식

일 시 2015년 6월 2일(화)
장 소 호텔인터불고 원주
주 최 김기선, 이강후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2일 화요일, 호텔인터불고에서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재생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회 개최

일 시 2015년 6월 3일(수) 14:00 ~ 18:00
장 소 수원시청 중회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수원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일 공동 연구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수원시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재생제도'를 대주제로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오성익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총괄과장,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제1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5년 6월 4일(목) 09:30 ~ 10:3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옥외(불법)광고물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일 시 2015년 6월 5일(금)
장 소 한국감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5일 금요일, 한국감정원과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7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2015년 6월 8일(월) 14:00 ~ 17:20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8일 월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7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과제·수탁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와 시도 정책연구과제 중간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방문 격려

일 시 2015년 6월 13일(토)
장 소 강남 영동전통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수 원장은 지난 13일(토)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12년 MOU 체결)을 방문하여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장상황 및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다. 이 날 하혜수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8명이 주말을 활용하여 장보기 및 음식점 이용을 실천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메르스 대응요령 등을 홍보하였다. 박승경 강남순대 사장은 "메르스 확산우려로 전통시장 이용객과 매출액이 1/2~2/3으로 감소하는 등 재고와 판매부진으로 상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혜수 원장은 "전통시장의 취약가게를 방문하여 지원했으며, 김 등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청사 용역직원)에게 전달" 하는 등 전 직원에게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

제12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12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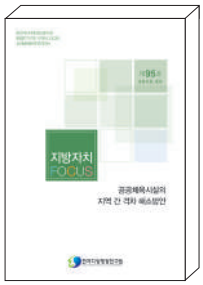




발간물

「지방자치 Focus」 제95호 발간
제 목 공공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저 자 박진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자치 Focus」 제96호 발간
제 목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저 자 김건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el. 02-3488-7361 / yj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 성공 도우미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Biz info www.1357.go.kr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전시회,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창조경제혁신센터



더 뜨거운 열정
더 창의적인 생각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도전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15개 전담기업은 당신의 창업의 꿈을 응원합니다.
도전이 가치가 되는 세상, 열정이 힘이 되는 대한민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합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포스코포항창조경제센터

전담기업 CJ LOTTE SAMSUNG 韓進그룹 SK HYUNDAI MOTOR GROUP 현대중공업 kt NAVER LG Hanwha 효성 GS DOOSAN daumkakao posco

지난호 Issue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05

지방자치실천포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대담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5